

4·19시기 과연 혼란기였다

김 동 춘

역사문제연구소 상임연구원 · 본지 편집위원

1

우리 현대사에서 4·19에서 5·16에 이르는 기간은 8·15 직후에 버금가는 혼란기로 기록되어 있다. 고등학교 국사교과서(1982년)에는 제 2 공화국이 “4·19의거 전후의 사회 정치적 불안과 무질서를 진정시켜 반공·국방 안보태세를 확립하고 민족의 숙원인 평화통일을 위한 국력신장과 외교 노력을 기울여야 했으나”, “일부의 분별없는 정치

세력이 책임이 따르지 않는 자유를 내세우면서 가지각색의 자기 주장을 지나치게 요구하는 크고작은 시위를 계속하였다. 심지어 어떤 시위대는 국회의사당에 난입하는 일까지도 있었다. 이와 같이 매일처럼 시위를 함으로써 사회혼란은 극도에 달하였다”라고 서술되어 있다. 현재까지 우리나라의 모든 공식적인 기록물이나 교과서도 모두 4·19시기 = 혼란·무질서·데모만능, 과도정부와 민주당 정권 = 무능·부패의 등식을 별다른 수정없이 반복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시각의 뿌리는 5·16 쿠데타 직후의 군부세력과 그들을 주축으로 형성된 민주공화당의 현실인식에까지 거슬러올라간다. 『혁명재판사』에서는 “5·16 군사혁명의 역사적 배경”을 설명하면서 “4·19 이후에는 데모가 지나치게 과감하여 사회를 크게 혼란케 하였고, 그것은 시간이 지날수록 만성화하여 커다란 정치문제, 사회문제가 되었다”고 기술하고 있다. 한편 『민주공화당사』에서는 “4월 학생의거로 인한 이승만 정권의 몰락은 과잉된 자유사조의 범람을 가져왔고 이것은 그 후에 집권한 민주당 정권을 무능한 존재로 만들어 무정부 상태를 노정케 하였다. 국민의 반공태세의 이완으로 국가의 안위가 심히 우려되던 터에 1961년 5월 16일 마침내 국군의 쫓겨나기를 보았다”고 서술하면서 군사쿠데타의 불가피성을 5·16 이전의 사회적 혼란에서 구하고 있다. 한편 박정희는 4·19시기를 ‘카오

스'라고 묘사하면서 "민주당 시대는 테모, 파업, 친구파 분쟁, 교원노조 등으로 국민들의 인상에 남아……8·15 이후의 무절서와 다를 바 없었다"고 술회하였다.

이것을 통해서 볼 때 4·19 이후 5·16 이전의 시기를 혼란과 무절서, 극도의 위기로 본 사람들은 주로 5·16 쿠데타의 주역들임을 알 수 있다. 그리고 군사정권과 제3, 4공화국에 협력한 지식인들이 이러한 논리를 더욱 세련화하여 5·16의 불가피성과 정당성을 설명하려는 목적에서 일반화시킨 역사해석임을 발견할 수 있다. 그리고 이후 20여 년 동안 박정희와 군부세력은 반정부데모를 무력화시키고 국가의 강력한 통제정책을 합리화시키는데 언제나 이 시기의 혼란의 경험을 들추어냈던 것이다.

2

물론 4·19 이후 시기에 사회 전부분에서 수많은 대중조직이 형성되고 그것을 주축으로 하여 갖가지 형태의 집회와 시위가 만연하였던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자유당의 몰락과 경찰, 반공청년단 등 국가기구의 이완은 숨죽이며 살아온 대중들을 정치 사회의 무대로 부상시켰다. 대학생과 고등학생들은 학생자치조직을 결성하여 재단비리 척결과 학내의 민주화, 어용무능교수 퇴진 등을 요구하였고, 이후 전국학생연맹결성준비위원회, 국민계몽대, 민족통일학

생총연맹 등을 조직하여 정치·사회운동을 전개하였다. 이외에도 4·19 청년학생동맹, 3·15 청년동지회, 4월혁명불구학생동지회 등의 4·19 당시 피해당사자들의 조직도 4월혁명의 철저한 수행을 위하여 각종 활동을 전개하였다. 4·19 직후부터 5·16에 이르는 기간 동안 51회의 대학생 시위, 117회의 중고등학생 시위가 발생하였다.

노동조합조직은 1960년 말경에 가서는 4·19 직후에 비해 전국적으로 약 300개 이상이 늘어났다. 그리고 임금인상, 단체협약, 부당해고 반대 등을 요구하는 합법·비합법 쟁의가 1959년에 비해 2배 가까이 증가하였다. 5·16 이전까지 35건의 커다란 쟁의가 발생하여 2만여 명이 쟁의에 참여하였다. 경남북 지역을 중심으로 전국 각 지역에 교원노조가 조직·확산되었다. 언론에 대한 통제가 완화됨으로써 약 1,500여 종의 언론이 등록을 하였다. 그리고 우익적인 색채를 지닌 23개의 정당과 혁신이념을 표방하는 16개의 정당을 포함한 50여 개의 정당이 난립하여, 8·15 이후의 국면을 방불케 하였다. 특히 이승만 정권하에서 제도정치권에서 배제되었던 구진보당계 인사들과 여타 진보적인 인사들이 결집되어 사회대중당, 사회당, 통일사회당, 한국사회당 등의 혁신정당을 결성하였다. 통일운동이 고양되면서 민족통일학생총연맹, 민족자주통일중앙협의회, 중립화통일연맹, 민족민주청년동맹, 통일민주청년동맹 등의 외곽·대

중조직도 등장하였다.

이외에도 6·25 당시 국군에 의해 억울하게 죽임을 당한 피학살자 유가족들의 조직, 조봉암과 김구의 사인규명을 위한 조직 등 이승만 정권하에서 반공의 명분하에 피해를 입은 사람들의 명예회복과 사실규명을 위한 조직과 운동도 활발하였다. 시위와 쟁의, 정치집단간의 파쟁, 각종 사회적 범죄가 빈발한 것 자체를 현상적으로 바라보면 ‘안정’에 대비되는 개념으로서 ‘혼란스러운 상황’이라고 할 수는 있다.

그런데 ‘혼란’이란 규정은 원래 가치중립적인 개념이 아니다. 통상 5·16 이후 군사정권이 ‘혼란’이라고 규정하는 사건들을 살펴보면 4가지의 유형으로 구분된다. 첫째는 학교민주화, 금융민주화, 사법기관의 비리척결, 경찰중립화, 어용노조 배척 등의 요구처럼 이승만 독재정권의 시녀로 전락된 사회 제부문의 민주화를 추진하는 운동이다. 이러한 운동은 집단적인 건의나 입법추진운동 등의 평화적인 방법에 호소하는 경우도 많았지만, 기득권을 가진 세력들이 개혁에 소극적이거나 심지어는 개혁 자체를 거부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폭력에 호소하기도 하였다. 장면 정권은 구자유당계 인사, 이승만 정권과 결탁하였던 재벌·관료들을 활용하고 있었다. 따라서 사회 제반의 급격한 변혁과 철저한 민주화를 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대부분의 민주화 요구는 무위로 끝나는 경우가 많았다. 오히려 민주당

은 반대세력을 제압하기 위해 자유당 때도 찾아볼 수 없던 반공입시특별법, 데모규제법 등의 입법을 추진하여 커다란 반대운동에 직면하기도 하였다.

둘째는 과도정부와 이후의 민주당 정권이 3·15 부정선거 관련자들이나 4·19 당시 발포 책임자들의 처벌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구자유당계 인사들이 여전히 기득권을 행사하려고 시도하는 데 대해 4·19의 피해 당사자들이나 민중들이 혁명의 철저한 수행을 요구하면서 전개한 운동들이다. 5·16 이후 혁명재판에서 ‘난동’으로 규정되어 법의 처벌을 받은 7·29총선 당시의 ‘부정선거규탄시위’, ‘투표함 탈취 소각행위’ 등이 여기에 속한다.

창녕, 산청, 광산, 김천, 남원, 음성, 삼천포 등 전국 각지에서 발생한 소위 선거 ‘난동’ 사건은 모두가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실제 이 선거과정과 개표과정에서 엄청난 부정이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불분명한 점이 많다. 그러나 이들 지역에서는 입후보자나 선거관리위원장 등 유지들이 과거 자유당원이거나, 3·15 부정선거의 실질적인 책임자로서 이승만의 하야와 함께 속죄하고 그에 따른 벌을 받았어야 할 사람들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다시 선거에 출마하여, 당선 가능성이 농후해지자 이것을 목도한 지방 민중들의 분노가 극에 달하여 일으킨 것이 소위 ‘선거방해’, ‘난동’ 사건인 것이다.

한편, 4월혁명 부상학생들이 의사당

에 ‘난입’한 사건도 무질서와 혼란의 예로 인용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 사건 역시 궁극적으로는 민주당의 ‘반혁명적’ 태도에 기인한다. 민주당은 발포책임자, 부정선거 관련자, 부정축재자들을 처벌하기는커녕 그들의 도피를 방조하고, 그들을 처벌하기 위한 특별법안의 제정을 고의적으로 지연·회피하였기 때문에 이에 격분한 4월혁명불구자학생동지회, 4월혁명상이학생동지회 등 1만여 명 이상의 학생들이 장면의 퇴진을 요구하며 의사당으로 진입하는 사건이 발생했던 것이다. 7·29 총선과 그것으로 결성된 국회는 학생들의 피의 대가로 성립된 것이었고 민주당 정권의 존립근거 역시 이승만 독재의 철저한 청산에 있었으므로 학생들의 이러한 요구는 지극히 당연한 것이었다.

셋째로는 1948년 유엔과 미국의 후원하에 탄생한 이승만 정권이 권력유지를 위하여 저지른 각종 사건들의 사실 규명과 억울한 희생자들의 피해보상을 요구한 운동을 들 수 있다. 이승만의 퇴진과 더불어 이러한 운동은 자연발생적이고 폭발적으로 진행되었다. 1960년 5월 11일에는 6·25 당시 거창양민학살사건의 피해유가족들이 사건 당시의 면장이었던 박영보를 생화장한 사건이 발생하였다. 이후 곧바로 문경, 산청, 함평, 남원, 화순, 곡성, 구례 등지에서 학살사건이 판명되기 시작하였고, 정확한 책임소재 규명을 위한 운동이 각 지역에서 발생하였다. 김구의 암살, 조봉

암의 사형 등의 사건과 함께 이들 사건은 이승만 정권하에서는 철저하게 베일에 싸여 있었는데 그 까닭은, 반공이데올로기의 지형 속에서 ‘좌익’으로 규정된 사건은 일체 거론이 금기시되었고, 피해자 가족들도 ‘좌익’으로 매도되는 것이 두려워 피해사실 자체를 숨기고 살아야만 했기 때문이다. 이승만이 물러나자 ‘반공’의 이름으로 저질러진 독재권력의 엄청난 죄악상이 세상에 드러나게 되었다. 그러나 피해 당사자들도 가해자들이 눈앞에서 활보하는 모습을 목도하고, 이성보다는 감정에 호소하여 억울함을 벗어나려 한 것은 지극히 당연했다고 볼 수 있다.

마지막 유형은 이승만 정권하의 지배 집단은 물론 민주당 인사들을 포함하는 모든 정치세력을 비판하면서 추진된 민족통일운동과 한미행정협정 반대운동을 들 수 있다. 과거 진보당에 관계하였거나, 해방정국에서 좌익운동에 가담한 경력이 있는 사람들, 자유당은 물론 지주, 친미인사 중심의 보수적인 민주당에 대해서도 환멸감을 느낀 진보적 정치인들은 외세로부터 자주적인 정권의 수립과,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통일방안의 마련에 관심을 쏟기 시작하였다. 이들은 기존의 북진통일론은 물론 허구적인 반공이데올로기의 철폐·개선을 요구하였고, 유엔과 미국에 의존하지 않는 남북 당사자 간의 교류와 평화적 통일노력을 촉구하였다. 이러한 분위기를 고양시킨 주역들은 선진적인 학생들



▲ 4·19직후 결성된 교직원노조의 집회광경

이었다. 학생들은 강연회, 공청회 등을 개최하여 통일논의를 확산시켰고, 5·16 직전에는 남북학생회담을 제의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운동은 겉으로 보면 4월혁명과 무관한 듯이 보인다. 그러나 통일논의의 제기는 민주화의 지연이 궁극적으로 분단현실에서 기인한다는 인식을 토대로 하고 있기 때문에, 민주화 운동의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등장할 수밖에 없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3

앞의 세 유형의 운동은 사실 동일한 맥락을 갖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왜냐하면 4월혁명의 철저한 수행을 위해서는 정치·사회 전영역에서의 민주화가

요청되며, 그것은 이승만 정권하에서 저질러진 각종 죄악상과 그 책임자의 규명 및 처벌을 의미하는 것이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자유당 정권이라는 것은 거슬러올라가면, 통일지향의 민족세력을 거세시킨 마당에서 미국과 유엔의 주선으로 구성된 천일, 친미인사들의 정권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4·19 직전 자유당 핵심인사들과 각료들 중에는 독립운동 경력자는 거의 찾아볼 수 없고, 대부분이 일제 식민지정책에 협력하였던 사람들이었다. 특히 경찰·관료 조직은 일제의 것을 그대로 계승하고 있었다고 봐도 무방하다. 따라서 4월혁명의 철저한 수행 = 사회제반의 민주적 개혁, '반혁명 인사'들의 처벌은 곧 식민지 잔재의 청산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했다.

그러한 과제의 수행은 이승만과 자유당의 권력하에서 제정된 각종 법령과 국민의 대표기관이 아닌, 혁명과정의 완수를 위한 특별 법령과 그것을 집행할 자격을 갖춘 새로운 대표자들에 의해 수행되어야만 했다. 그런 자유당과 본질적으로 동일한 계급적 조건에 있는 민주당이 혁명의 성과물을 그대로 이양받음으로써 그들은 처음부터 혁명적 개혁을 거부하였다. 학생 외에는 철저한 개혁을 부르짖는 조직된 혁명세력이 존재하지 않는 마당에서, 자유당 시대의 관료, 재벌, 국회의원들은 개혁의 요구를 비웃었다. 그들은 8·15 이후에 그러했듯이 재빨리 변신을 시도하여 내각제 개헌을 통과시켜, 국회의원에 재출마하였고, 민주당 정권에 추파를 던졌다. 이승만에게 흘러들어갔던 정치자금 은 민주당 신파와 구파에게로 돌려지기 시작하였고, 그것은 자유당 시절의 부정부패를 오히려 능가하는 것이었다.

조직된 정치세력과 물리력을 갖추지 못한 학생 및 양심적 민주세력, 자유당하의 피해자들로서는 극한적인 시위·농성 등의 방법에 호소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이러한 대중적 요구가 무정부 상태를 야기하였고 극도의 사회적 혼란을 가져왔다고 볼 수는 없다. 당시의 기록들을 살펴보면 학생들의 학내민주화운동과 국민계몽운동 및 각종 시위는 지극히 평화적이었다. 노동쟁의의 경우 그 대부분이 모두 “구정권하의 부패

제거의 기운이 조합조직의 개편정비를 요구하게 되었기 때문에 발생하였고……소수 비합법적인 경우도 있었으나 그 대부분은 합법적이었다.” 각종 경제범죄는 늘어나는 양상을 보였으나, 강력범의 경우에는 “집권당과 결부된 강력범이 일망타진되어” 오히려 줄어드는 현상이 나타났다.

그러나 각종 시위나 집단행동의 현상 형태가 평화적이었다는 것은 중요하지 않다. 왜냐하면 통상 ‘혼란’이라고 할 때는 개인이나 집단이 자기의 이익만을 추구함으로써 초래되는 아노미 상태를 의미하기 때문이다. 4·19 이후의 상황은 그렇지 않았다. 4월혁명 주도세력인 학생, 양심적인 지식인, 자유당 정권하의 다양한 피해자들의 요구는 집단이나 정파의 자기 이익을 위한 것이었다기보다는 사회의 객관적인 요청을 반영하는 것이었고, 만약 그러한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앞으로 언젠가는 반드시 해결되어야만 할 성질의 역사적 과제들이었다. 여기서 역사적 과제란 구식민지적 질서의 완전한 청산과 식민지화를 저지하는 것, 그리고 내적으로 반봉건 개혁을 철저히 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들 각 집단의 민주화 요구, ‘반혁명 인사’ 처벌의 요구, 과거사실 규명의 요구를 ‘혼란’이라고 못박는 것은 이들의 요구를 이기적 욕구충족 정도로 격하시키는 것이며, 나아가 이러한 대중적인 요구 자체를 불법시하는 전체주의적인 현상유지적 사고이며 동시에 친

미반공국가를 재편하려는 지배세력의 계급적 이해의 표현이라고 해도 무방할 것이다.

4

그런데 이 시기를 혼란기로 규정하는 가장 커다란 근거는 앞의 세 유형의 운동에 있는 것이라기보다는 민족통일 논의의 제기, 즉 적을 이롭게 할지도 모르는 감상주의적이고 ‘무분별한 통일운동’, ‘좌익적 성향을 지닌 혁신당운동’에 있다는 것을 쉽사리 발견할 수 있다. 5·16 후 ‘혁명재판’의 과정에서 제시된 판결문에는 이러한 운동을 보는 군사정권의 시각이 전형적으로 나타나 있다. 이들의 통일운동은 “적화할 기회를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이북 괴뢰집단의 합법을 가장한 적색침략방법에 이익이 된다는 점”, “무원칙하고 비현실적이고 공산화될 위험성이 있는 중립화 통일방안을 한국통일의 유일한 방안인 것처럼 보도하므로” 처벌받아 마땅하다는 것이다. 한편 한미경제협정 반대운동에 대해서는 “대한민국의 경제안정 및 자립 경제 수립과 대공방어 및 국가보전을 위하여 미국의 경제원조가 필요불가결하며 또한 그 원조가 구세기적인 식민지 정책에 인한 것이 아니고 자유우방의 저개발국가 경제발전을 위한 세계정책의 일환”이므로 반대자는 우방과의 우호적인 관계를 저해하는 죄를 저질렀다는 것이다.

우리는 군사정권이 자기존립의 근거

를 결국 친미반공체제의 위기에서 구하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 4·19시기의 혼란의 내용을 겉으로는 민주당의 무능과 부패에서 찾기도 하지만 기실은 “반공태세의 이완으로 인한 국가안위의 위협”에 커다란 비중을 두고 있음을 알 수 있다. 5·16 쿠데타 직후 박정희 일파는 혁명 공약 제1조에서 “반공을 국시의 제1로 삼고 지금까지 형식적이고 구호에만 그친 반공태세를 재정비 강화한다”라고 밝히고 있다. 즉 ‘모든 부패와 구악을 일소’한다는 명분, 무질서를 바로잡는다는 명분이 ‘반공태세의 재정비’에 가리워진 것이다. 그런데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제1공화국만큼 철저한 반공정권을 어디에서 찾아볼 수 있으며, 이승만 정권하의 지배집단보다 더 철저한 반공투사들이 어디에 있는가. 거슬러올라가면 민족주의 세력의 부활과 좌익의 등장을 가장 싫어한 사람들이 바로 과거의 친일 매관세력들이 아니었는가. 5·16의 등장을 가장 환호한 세력이 누구였겠는가는 구태여 지적하지 않아도 금방 알 수 있다. 그리고 ‘혼란’의 죄목으로 이른바 혁명재판을 받게 된 사람들 중 부정선거, 부정부패의 주범으로 검거된 자유당 시대 지배집단의 거의 전부는 곧바로 풀려날 것이라는 것도 너무나 쉽게 짐작할 수 있다.

이제 우리는 4월혁명 후의 소위 ‘혼란’ 혹은 위기의 본질은 그 역사적인 맥락에 있어서 8·15 이후의 ‘혼란’과 동일한 의미구조를 가지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일제 식민지 지배가 영구히 계속되기를 희망했던 세력은 식민지권력이 안정적으로 관철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보았다. 이러한 합리성은 지배자의 입장에서 본 도구적이고 수단적인 합리성이었다. 그러나 피지배자이자 피억압자인 한국민중의 입장에서는 식민지 지배는 철폐의 대상이었다. 후자의 입장에서는 8·15가 '카오스'의 시작이 아니라 진정한 '합리성'을 향한 진통의 출발이었다. 이러한 변혁의 진통이 '출산'의 기쁨을 낳지 못함으로써, 4·19라는 새로운 진통을 또 낳은 것이다. 이승만 정권의 역사적인 기반은 구식민지 사회경제질서의 온존에 있으므로 정권의 몰락은 필연적으로 사회경제적 개혁

과 분단종속구조의 철폐로 나아갈 수밖에 없었다. 따라서 이승만의 하야 이후 더 근본적인 개혁을 추구하는 운동이 비등하게 된 것은 필연적이었다. 오로지 분단종속구조의 철폐를 두려워하는 집단만이 이러한 운동을 '혼란', '무질서'로 파악하고 있는 것이다. 군사정권은 이들의 위기의식을 집약화해서 표현한 것이다.

5·16 쿠데타는 이러한 '혼란'을 종식시키고 새로운 '질서'를 부여했지만 그것은 혼란의 진정한 종식이 될 수 없었고, 또 한번의 혼란을 예고하는 것이었다. 즉 1980년의 '혼란'과 1987년 6월의 '혼란'은 5·16에서 이미 예고된 것이다.

